



[뉴스]
네덜란드 간 JY
ASML에
EUV 공급 요청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47.38 (-45.59)	코스닥 799.41 (-24.17)
금리 (연평균) 3.666 (+0.118)	환율 (원/달러) 1290.5 (+4.10) (15일)



발사 연기된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해 발사가 잠정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5일 누리호와 발사대 사이의 신호가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원인을 파악 중이다.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기립하고 있다.

/뉴스스

암호화폐 시총 1조달러 붕괴 '뱅크런' 공포... 더 떨어진다

고물가·세계적 긴축 등 악재 산적
비트코인 5거래일만에 30% 급락
이더리움도 최고 대비 76% ↓
셸시어스 인출 중단, 뱅크런 촉발
美FOMC "금리인상엔 추가하락"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암호화폐시장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투심)가 얼어붙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뱅크런(bank run·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동안 30%(약 9000달러)나 급락해 2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단기간 최대 낙폭이다.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 11월(6만8000달러)과 비교하면 약 7개월 만에 약 70%가 폭락한 것이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가파르게 추락해 최근 5일간 36.1%, 최고 대비 76.3%나 급락했다.

암호화폐시장은 올해 호재를 찾아볼 수 없다. 악재만 가득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루나사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세계적 긴축, 금리인상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에는 셸시어스 네트워크가 인출중단을 선언하면서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다. 셸시어스는 탈중앙화(DeFi)를 내세운 대출 플랫폼으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빌려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뱅크런을 우려한 셸시어스가 인출 및 계좌 이체를 중단했다. 셸시어스의 판단은 잘못됐고 결과는 뱅크런으로 이어졌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최근 하루 만에 16%가량 증발해 18개월 만에 1조달러(약 129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루나사태에 이어 셸시어스의 계좌 이체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시장의 위기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

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업계는 최근 수년간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규모를 불려오면서 위기대처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대출 플랫폼들도 셸시어스 처럼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로 하락장에 취약해 공포 심리가 더 확산되면 끝없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암호화폐 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고되어 있다.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안다(Oanda) 수석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Edward Moya)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 1000달러가 깨지면 옵션 시장 내 헤지(위험회피) 수요로 인해 현물 시장에서 막대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아이야르 부사장은 "셸시어스의 인출 중단 조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우려로 이미 압박받는 암호화폐 매도세를 한층 악화시켰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1~2개월간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isy2665@metroseoul.co.kr

"법인세·유류세 인하 등 총동원"

국민의힘 '제3차 당정협의회'서 민생안정 위해 세제지원 확대 요청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은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당의 제안에 종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윤석열 정부 성공 성패를 가르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과 정부는 저성장 극복 차원의 규제 개혁과 함께 민간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세금 인

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인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혁신 기조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줄이고, 규제도 개혁해 민간 주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다.

여기에 더해 당 정책위 산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서민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첫 회의에서 민생 현장 목소리가 담긴 입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분산투자로 '연금부자' 기대감

디폴트옵션이 온다

<중>수익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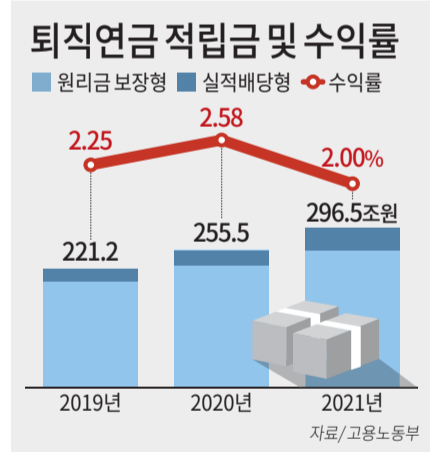
해외 선진국 이미 제도 도입돼
美, 연평균 10% 육박 수익 기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폴트옵션 도입 효과로 원리금보장형 보다는 실적배당형 등으로 자금이 분산되면,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퇴직연금에서도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산 운용이 어려울 경우, 정부 당국에서 승인한 연금적격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타켓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



F),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이다. 다음달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기존에는 비중의 30%까지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액을 주식형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장해 왔다.

<4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규정 따랐다"… 3시간 구속심사 종료 /사진 뉴스스
▲ 6·25 참전 용사, 안전 조끼 벗고 새 여름 단체복 입는다

▲ 차기 지도자 李 29.3%, 吳 23.8%, 韓 15.1%
▲ 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박상혁 수사, 정치보복 신호탄"



▲ 새정부 과제 1순위는… 일반인은 '경제 양극화', 전문가 '인구'
▲尹, 김 여사 지인동행 논란에 "봉하마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사진 뉴스스